‘단식·삭발·삼보일배·붕어빵까지’ 122일 탄핵 민심 이끈 시민

거리 나선 시민·정치인 단식·삭발 투쟁
“신속 파면” 아스팔트 518m 삼보일배
5·18주먹밥, 탄핵 집회 붕어빵 나눔 재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4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헌정유린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결사대’가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동안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윤 대통령의 파면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시민 학살을 겪은 지역민들은 45년 만에 내려진 초유의 계엄 사태를 두고 또다시 집단 트라우마와 공포에 빠졌다. 이들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법과 상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리에 나와 연대와 나눔으로, 때로는 단식·삭발 등 강력한 투쟁으로 탄핵 민심을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곧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한밤중 기습 계엄은 일단락됐다.

45년 전 계엄의 공포를 겪은 지역사회는 부글부글 끓었다.

이튿날 광주 86개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4일을 기점으로 매주 주말 광장에서 탄핵 집회를 개최했다. 선고가 이뤄진 이날까지 총 47차례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월 14일에는 광주 시민 2만 명이 금남로에 운집, 거리 행진을 하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뒤인 16일에는 농민들도 가세했다. ‘내란수괴범 체포조’ 현수막을 내건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과 쌀값 안정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6일간 도로를 달려 서울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붕어빵 맛집’을 자처하며 광장에 나선 교사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집회에 따뜻함을 더했다.

이재남 평동초 교장을 중심으로 모인 학교장들과 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탄핵 집회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에서 매주 주말 붕어빵 나눔을 시작했다. 다음 세대에 바른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물려주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연대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주어진 주먹밥이 붕어빵으로 재현된 순간이었다.

지난달 7일 구속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본격적인 투쟁이 펼쳐졌다.

지역사회는 윤 대통령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에 따라 석방되자 삭발·단식 투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광주 지방의원 7명은 지난달 11일부터 8일간 5·18민주광장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도 같은 기간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시민들은 아스팔트에 몸을 내던지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광주 시민 사회 단체는 지난달 26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금남공원까지 518m 거리를 왕복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시민들은 넉 달 간의 계엄 정국이 막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탄탄한 민주사회로 거듭나길 바랐다. 진영 논리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은 사회가 봉합되길 희망했다.

탄핵 집회에서 붕어빵 나눔을 이어온 이재남 평동초 교장은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정치인·법률가에게만 맡긴 결과”라며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개선하며 탄탄한 민주 시민의 역량을 구축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칠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최소한의 법과 상식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넉 달간 탄핵 집회를 이끌어온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

헌법

소장권한대행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정계선
	진보	진보	중도	중도	중도 보수	보수	보수	진보

1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할 수 없어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 아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 군경 투입 위법성	군경 투입·국회 봉쇄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헌법 조항 위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위반
3 계엄포고령 위헌성	정당제도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탄핵인용 8 : 0 기각

▶중대한 법 위반행위 전원일치 인정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

자료: 헌법재판소

25.04.04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윤석열 파면… 광주·전남 미완의 대선 공약 어떻게 되나

광주, AI·5월 정신 헌법 수록·미래차·군 공항 이전·달빛철도 등
전남, 국립의대·한국형 아우토반·무안공항 활성화·K디즈니 등
시계 제로… “현안 연속성 확보해야” “지역 발전 큰 그림 필요”

12·3 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파면되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과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언약한 광주·전남 주요 공약들이 미완의 현안으로 남게 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조기 대선 후 새 정부에서 국정 연속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 현안들을 큰 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들어 심화된 수도권 일극(一極)체제와 지방자치·지역균형 소멸시대를 접고,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4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광주 발전공약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일명 한국형 아우토반)·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198.8㎞)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제시했다.

취임 이후에는 5·18정신 헌법 전문(前門) 수록’과 ‘인공지능 2단계(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비 지원, AI 영재고 설립,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 확충,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등을 추가 약속했다.

전남 대표 공약은 7가지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비롯,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단지·푸드바이오밸리, 서남해안 생태관광·휴양벨트 등이다. 한국형 아우토반은 광주·전남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

취임 3년 차인 지난해 3월에는 전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VIP 약속’으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일명 ‘K-디즈니’, 여수~익산 전라선 179.4㎞ 고속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을 공개 약속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이지만, 본궤도에 오르거나 청신호가 켜진 사업은 많지 않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광주 복합쇼핑몰 3종(더현대 광주·신세계 백화점·어등산 스타필드)이 잰걸음으로 진행 중이고, 한국형 아우토반은 정책적·기술적 검토용역이 착수된 상태다.

달빛고속철도는 지난해 1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고, 5·18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약속하고 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총사업비 3685억 원 중 1607억 원이 확보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현안은 더디게 진행되거나 수 년 간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 헌법 수록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개헌 특위 건의서까지 전달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공항 통합 이전은 3년 만에 범정부협의체 회의가 예정됐지만, 비상계엄 후 잠정 연기됐다.

달빛철도는 실무협의체까지 구성됐지만 정부와의 논의 단계에서 일단 멈췄다. 광주의 미래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사업은 올해 본예산 확보조차 안됐다.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AI 영재고는 부지까지 확정하고 설계·착공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 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전남의 경우 우선, 국립의대가 명쾌하지 풀리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 도화선이 된 증원과 별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 완결성을 위한 최소 요건인 데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통합의대 신설의 필요충분조건까지 갖춰진 상황이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실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안공항 관문화는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교착상태인 와중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터지면서 개항 18년째 국토 서남권 관문으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은 찾지 못하고 있다.

30개 대선공약에 필요한 국비는 2조 1202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331억 원, 비율로는 1.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수~익산 전라선, 국립갯벌습지 정원 조성 등 7개 사업은 사전절차, 무안 항공국가산단 지정 등 4개 사업은 4년째 기획단계에 멈춰 있다.

K-디즈니,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도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윤 대통령의 공언으로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지역 정·관가에서는 “대통령 파면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대선 공약과 공언은 대국민 약속인데다 국가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며 “꼼꼼하고 치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심화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사라진 지방시대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큰 그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병남 기자

윤 파면… ‘계엄 관여로 탄핵’ 박성재·조지호 심판 영향은

변론 끝낸 박 장관…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할 듯
윤 대통령 결정문에는 국무회의 참석 정도만 언급돼
‘국회 봉쇄’ 조지호 청장 관련 사실관계 폭넓게 인정
변론준비기일도 못 연 상황이라 시간 오래 걸릴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발표한 4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파면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비상계엄과 관해 탄핵을 소추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의 심리를 남겨 놓은 상태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이른바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박 장관과 관해서는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그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언급된 바는 더 없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극적인 가담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을 지난달 18일 한 차례 열고 마무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전원재판부 선고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헌재는 다음주 목요일인 오는 10일 문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심리해 왔던 남은 일반사건들을 선고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박 장관과 함께 탄핵된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출입을 차단했고,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에 가담한 점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대목에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들은 후 1700명의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20분께 조 청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 관계도 전날 결정문에 명시됐다.

다만 헌재는 조 청장이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불러 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위치 확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8분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분 확인을 거쳐 의원, 보좌진 등 국회 상시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런 사실관계를 가늠해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조 청장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을 고려하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뉴시스